

트럼프 관세 전쟁과 한국 경제

초록

전후 80년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세계화 정책이 보호무역과 근린국뺏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음,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타국이 미국의 수익을 도둑질한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분업체제로 상품을 조달하고 금융·서비스 경제로 재편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때문임.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경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음. 관세를 피해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산업공동화로 고용과 세수가 줄고, 지역소멸과 국내총생산 감소로 이어짐. 미국의 경제침탈에 맞서 국민 안전과 건강, 식량자립, 공정거래, 정부조달에서 공공성과 안보, 기간산업 외국인소유 제한 등 경제주권을 양보할 수 없음. 정부는 대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경제 확장과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apple6309@hanmail.net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221
- 팩스: 02-2670-9299
-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발간물은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3

1. 트럼프 관세 전쟁 4

 1)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 4

 2) 트럼프 관세정책의 전개 과정 5

 3) 미국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분석 7

 4) 미국의 상호관세 근거 9

2. 한국의 산업과 고용 충격 12

 1) 제조업 충격 12

 2) 정부조달, 농축산물, 디지털 무역 등에서 충격 14

 3) 한국 수출 및 부가가치 감소 14

3. 시사점 15

■ 참고문헌 17

요약

■ 트럼프 관세 전쟁 배경

- 트럼프는 4월 2일 상호관세 25%를 한국에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높으며 FTA 체결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GDP의 120%)에 이르며, 제조업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경제패권이 흔들리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켜 패권을 회복하려 하고 있음.
- 트럼프의 상호관세 근거는, 미국의 경제재건과 안보 회복을 위해 호혜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임. 미국은 지속적인 상품무역 적자로 제조 기반이 공동화되고, 첨단제조 능력을 제고할 인센티브가 줄었고, 중요한 공급망이 훼손되었으며, 방위산업 기반을 적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경제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 또한 미국의 경제 추락은 외국의 위조상품, 불법복제, 영업비밀 도용, 보조금, 비시장 관행 등 때문이며 외국의 변영은 미국의 수익과 일자리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관세 전쟁은 미국우선 경제패권주의

- 트럼프의 보호무역 논리는 수십년 간 자유무역을 외치며 WTO와 FTA를 주도해 온 미국의 경제정책과 모순되며, 외국의 희생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제국주의적인 태도임. 미국도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보조금을 주고, 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매각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함. 특히 약소국일수록 가혹하게 관세를 매기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음.

■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대응

- 트럼프 관세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큼, 수출주도성장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며 기업은 관세를 피해 해외로 이전해도 이윤만 보장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국내생산과 고용, 세수 감소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감소로 연결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노동자, 서민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며 공공조달, 공정거래, 건강과 안전, 노동권, 방송·발전 등 기간산업 외국인지분 제한, 식량자립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규제는 경제주권 차원에서 필수적임. 미국의 일방적인 FTA 협정 위반과 수입 개방 요구에 대해서 양보만 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 내수 확장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

1. 트럼프 관세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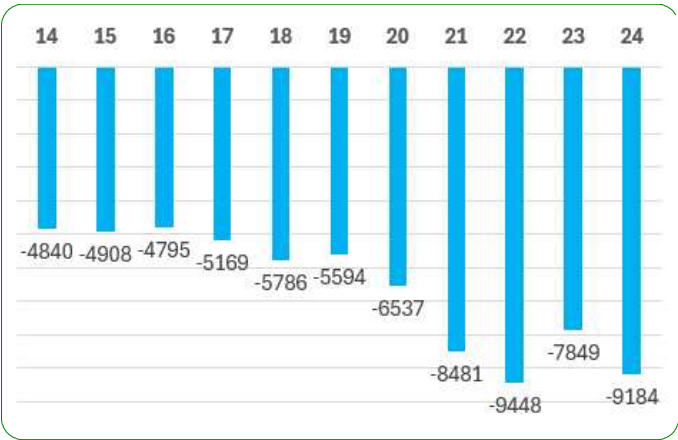
1)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

① 세계경찰에서 고립주의와 실리주의로 전환

- 미국은 세계경찰 역할로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자유세계를 지켜 왔음.
- 동맹국에 경제지원과 시장 개방으로 무역적자, 그리고 방위비 지출로 재정적자가 늘어났음.
- 이에 트럼프는 동맹국이 방위비를 부담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 1] 미국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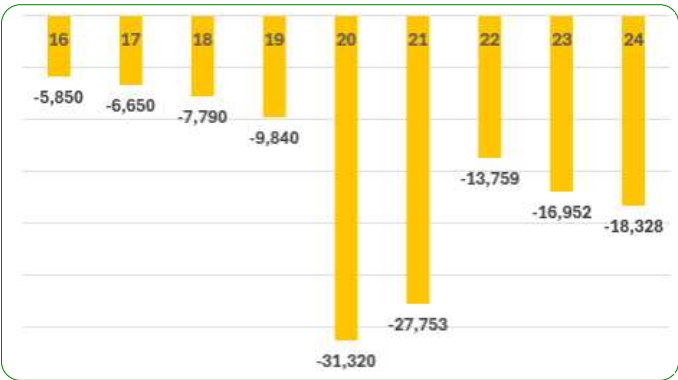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자료: 미국 상무국 자료 토대로 재작성.

[그림 2] 미국 재정적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Federal Budget Receipts and Outlays.

② 중국 등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하고, 미국 투자 압박하여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 중국으로 첨단기술 이전을 막고 중국산 원자재 수입을 통제하여 미국의 경제패권을 유지, 이를 위해 중국에 60%까지 관세 부과 계획(2025년 4월 54% + 기존 15% 관세 부과)
- 모든 나라에 관세를 물려 수입 제품이 비싸지면, 미국산 제품이 더 잘 팔리고 미국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함

③ 미국에서 관세는 대통령 재량으로 신속하게 행정명령이 가능하므로, 트럼프 통상정책의 핵심수단임

-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하고 미국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칭송
- 1930년 관세법 338조: 부당한 요금,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 이 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EU의 디지털서비스세, 한국의 쇠고기 30개월 유통 제한)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산업이 해외 수입품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나, 군사안보상 위협을 받을 경우, 대통령은 50% 관세 부과 권한 부여. 국내 산업과 노동자에 지원 프로그램과 실업수당 제공(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2025년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 1974년 무역법 301조: 미국 무역대표부가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12개월내 완료)하고 필요한 부분 보복조치 가능(1985년 일본 반도체 시장 접근 제한과 덤핑 조사)
-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거래 규제(수출입 금지), 자산동결, 경제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를 무기화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임(북한 대량살상무기·인권문제로 금융제재, 중국 화웨이 제재, 1979년 이란혁명으로 미국인 인질 사건 이후 이란자산 120억 달러 동결, 2025년 상호관세)

2) 트럼프 관세정책 전개 과정

① 트럼프 1기

- 2017년 8월 트럼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등 부당한 관행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
- 2018년 3월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2018년 3월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에 15~25% 보복관세 부과,
7월 중국,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
- 2019년 5월 미국,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율 10%에서 25%로 인상,
8월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2019년 6월 중국,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관세율 5~25%로 인상
- 2019년 9월 미국, 1,12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 2019년 9월 중국,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5~10% 보복관세 부과
- 2020년 1월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미중 1단계 합의안 서명
- 2020년 1월 미국, 시행 계획이던 1,600억 달러 규모 관세 철회, 1,2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해온 15% 관세를 7.5%로 축소
- 2020년 1월 중국, 4개 부문에서 2년간 2천억 달러 미국산 제품 구매 발표
- 2018년 대중 실효 관세율이 3%에서 21%로 상승, 미국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8%에서 2024년 25%로 감소. 그러나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 가능성 제기

② 트럼프 2기

-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 취임 6주 만에 10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 400개 이상의 행정조치(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선언 등)로 상대 국가 기선 제압
- 1월 20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예고
- 1월 26일 불법 이민자 수용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즉각 25% 관세 부과, 이후 이민자 수용으로 관세 부과 보류
- 2월 1일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2/4 발효)
-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관세 10% 추가 발효
- 2월 10일 중국, 미국산 석탄·천연가스에 15% 관세 부과, 원유, 농기계, 대형자동차, 픽업 트럭에 10% 관세 부과, WTO 제소,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개시
- 2월 10일 미국,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예고
- 2월 26일, 유럽연합에 25% 관세 발표 예고
- 3월 4일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 발효, 대중국 관세 10% 추가하여 20% 적용
- 3월 9일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 관세 부과
- 3월 12일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3월 24일 트럼프,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하는 나라 4/2부터 25% 관세 부과 발표
- 4월 2일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 무역적자 큰 나라에 상호관세 9일부터 적용 발표
- 4월 4일 중국,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 희토류 9종 거래 금지
- 4월 9일 미국, 중국에 34%(상호관세)+20%(펜타닐 관세)+50%(보복관세)+15%(기존관세)

[표 1] 미국 우선 정책 대통령 각서

구분	분류	주요 내용
불공정 불균형 무역 교정	상무부	무역적자 원인 및 경제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 및 추가관세 권고
	재무부	외국과의 관세 및 무역관련 수입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RS) 설립 검토
	무역대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공개 협의 개시
	무역대표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 파악, 해법 권고
	재무부	환율조작 및 불균형 대응 방안 권고
	무역대표	기존 무역협정 검토 및 상호 호혜적 수정안 권고
	재무부	외국의 미국 시민·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 부과 여부 수사
대중 경제통상 정책	무역대표	중국 정부의 제1차 미중무역합의 이행 의무 준수 조사
	무역대표	무역대표부 대중국 301조 조사보고서 검토
	상무부	중국에 공여된 지적재산권 현황 조사 및 평가
경제안보	상무부	국가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진단보고
	상무부	전략적 적성국 대상 수출통제 시스템 진단, 기술 우위 유지 방안 권고
	상무부	철강, 알루미늄대상 무역확장법 조치 현황조사 및 실효성 점검

- 자료: 다음에서 재정리, The White House(2025. 1. 20.), "America First Trade Policy,"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3) 미국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분석

①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바이든 때 2024년 보고서는 '근로자의 이익 증대'를 명시했으나, 2025년 보고서는 이를 생략하고 '무역법 집행 및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 증진'을 추가로 제시. 무역장벽을 정부의 법률, 규제, 관행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로 광범위하게 정의.
- 올해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대통령 보고(4/1) 및 상호관세 부과(4/2) 직전에 발표

② 주요국에 대한 핵심 조치

- EU : 보고서는 디지털서비스법(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위해 매출액에 과세)과 디지털시장법(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비판, 유전자변형 농작물이나 성장촉진 화합물이

사용된 육류 금지 조치 부당함 지적

- 중국 : 보고서 400쪽 중 50쪽을 할애하여 집중 공격
중국이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세계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 이런 정책도구는 외국기업을 차별하거나 중국이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이를 통해서 중국기업은 외국 경쟁업체를 희생시키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강조
- 일본 : 자동차 안전 점검 방식이 미국 자동차 기업을 차별했고, 탈탄소 차량 보조금으로 사실상 일본기업 지원, 쌀 수입에서 과도한 규제와 투명성 결여, 연어·명태·청어 등 수산물에 10% 관세로 미국 수출 애로, 신발·여행용품에 높은 관세로 미국산 수출 장벽, IT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우려 지적

③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지적

- 2023, 2024년 보고서 내용과 큰 틀은 유사하나,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부분들이 언급되었고, 올해 새롭게 제기한 부분이 추가됨
-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 허용한 부분
 - 미국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농촌진흥청, 2025.3)
 - 유전자교정생물체(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적용에서 제외(2024.9 국회 발의)
 - 미국산 반추동물 성분 함유된 애완동물 사료 수입 일부 허용(농림부 2025.1),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공부문 표준 암호(AES) 2026.1부터 허용(국정원, 2024.9)
 - 공공부문 전산시스템 정보를 기밀, 민감, 공개 등 3개 등급으로 분류 예정(기존 과기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 준비한 국내업체 불리)
 - 중간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 현지 암호 알고리즘 사용 요구 면제 계획 발표(국정원, 2024)
- 2025년 보고서에 새로 추가된 부분(미국이 부당하다고 지적, 새로운 요구)
 -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플랫폼 대기업 독과점 규제에 미국 빅테크 기업 포함되는 것 우려(디지털플랫폼법)
 -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에 과징금 부과 기준 확대(개인정보보호법 등)
 - (국가핵심기술 장벽)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불허(산업기술보호법)
 - (투자 장벽) 발전 부분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에 원전 포함(전기사업법)

- (국방 절충교역) 1000만 달러 이상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 전 세계 방위산업의 관행이며 미국도 2022년 27건의 절충교역 체결(방산 수출 금액 중 33%)
- 트럼프는 자동차, 쌀, 쇠고기 지적. 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 부과
- 상호관세 도입 산식 :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국제무역, 경제문헌과 정책관행에서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 계산했다고 하나, 사용 모델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무역 관행이며 부정행위의 합산이라는 개념에 기반. 실제 산출 공식에는 비관세 장벽 등이 포함되지 않음. 산식은 특정 국가와의 상품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미국의 전체 수입액으로 나눈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눔. 이 산식으로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 20%를 부과 (WTO의 평균 관세 계산법과 전혀 다른 개념).
[한국 상호관세 25% = 무역적자(660억)/수입총액(1,315억) × 1/2]
- 미국은 무역수지에서 상품수지만 계산하고 서비스수지(한국이 만년 적자)는 제외함
- 한국은 최근 미국 투자 증가로 설비 및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음.

[표 2] 한국의 대미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698	664	686	727	733	741	959	1,098	1,257	1,278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 국가별 평균 관세율과 미국의 상호관세

(단위: %)

국가	미국	한국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EU	인도	베트남
평균 관세율	1.47	4.85	2.31	1.21	2.35	5.1	2.7	14.26	4.28
상호 관세		25	34(+20)	25	25	24	20	26	46

자료: WTO, 세계은행

4) 미국의 상호관세 근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성명 (백악관, 2025년 4월 2일)

① 경제재건 및 국가와 경제안보 회복을 위한 호혜주의 추구

- 지속적인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로 인해 제조 기반의 공동화 초래, 이는 국내 첨단제조 능력을 늘리려는 인센티브를 줄이고, 중요한 공급망을 훼손하며, 방위산업 기반이 외국의 적대 세력에 의존하게 함.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무역 관계에서 호혜주의 결여와 타국이 저지른 통화 조작, 부가가치세 등 해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 미국의 국제적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며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함
-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는 개별적인 상호 고관세를 부과
- 또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는 수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무역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상당한 해당 조치를 하고,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일치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음
-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구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25%)가 부과된 산업은 상호관세에서 제외함

② 경제주권을 되찾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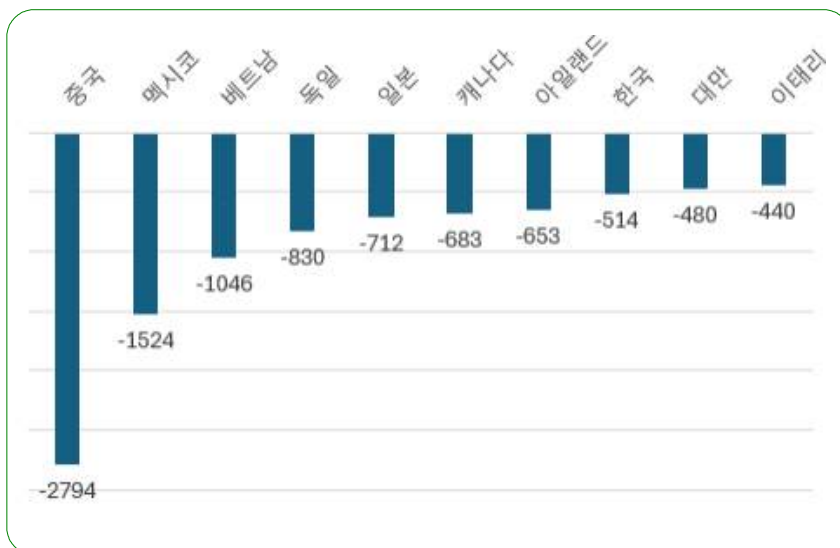
- 미국 기업들은 연 2,000억 달러 이상의 부가세를 외국 정부에 납부. 반면 유럽 기업은 미국 수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 위조상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도용으로 미국 경제의 연간 2,250~6,000억 달러 손실. 위조제품은 미국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고 미국인의 보안, 건강, 안전을 위협. 위조 의약품의 세계무역액은 44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치명적인 펜타닐이 첨가된 약물의 유통과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불균형은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에서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초래, 제조 기반의 해외이전으로 이어졌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힘을 실어주었고, 미국의 중산층과 도시에 큰 타격을 주었음.
- Made in America는 행정부의 경제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임, 대통령의 상호무역 의제는 미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및 기타 상품을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
- 호혜무역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무역으로 우리의 경쟁우위를 높이고,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경제적 안보를 강화함.
- 이러한 관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무역 관행의 불공정성을 조정하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균형 있게 조절하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 무역 파트너에게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다시 균형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③ 미국 제조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미국은 2001년 28.4%에서 2023년 17.4%로 감소
- 상품에 대한 외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져 미국의 공급망은 지정학적 혼란과 공급 충격에 취약하고, 군사물자 비축량은 국가방위 수호에 매우 부족함
- 1997~2024년 미국의 약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상실
- 외국 생산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핵심 제조기술과 제조 능력이 필요함.

[그림 3] 미국 주요 적자국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④ 무역 불균형 해소

-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이용해 우리보다 더 높은 관세 부과, 승용차에 미국은 2.5% 관세를 부과하지만, EU(10%), 인도(70%)는 훨씬 높은 관세 부과. 네트워크 스위치와 라우터, 예탄올, 쌀, 사과 등도 마찬가지임
- 비관세 장벽은 또한 미국 제조업체가 세계 시장에 상호 접근하는 기회를 박탈함
- 중국의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미국의 산업 파괴, 2001~2018년 미중 무역적자의 증가로 37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상실. 외국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국가 안보 위협
- 중국, 독일, 한국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역진적 조세 시스템, 환경 파괴에 낮은 처벌, 근로자 임금 억제 등 정책 추진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 방해받음. 특정 미국 표준 수용 불가, 중복되는 테스트 및 인증 요구, 투명성 문제 등으로 대한국 무역적자가 2019년

에서 202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

⑤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률

-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권리라기보다는 특권임
- 미국은 헛된 약속에 대한 대가로 국제무역에서 자신을 마지막에 두지 않을 것임
- 상호관세는 트럼프 공약, 관세는 바이든이 남긴 경제적 피해를 되돌리고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끄는 계획의 핵심
- 관세는 에너지 경쟁력, 감세,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제 완화 등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뒷받침함

⑥ 관세의 효과

- 관세는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 위협을 제거하고 경제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입증
- 트럼프 첫 임기 중 관세가 미친 영향에 대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관세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제조업과 철강 생산과 같은 산업에서 "상당한 리쇼어링"을 이끌었다고 함.
-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시행한 관세는 "인플레이션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전체 가격 수준에 일시적인 영향만 미쳤을 뿐임.
- 2024년 경제 분석에 따르면, 10%의 글로벌 관세가 경제 성장을 7,280억 달러로 늘리고, 2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질 가계 소득을 5.7%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음.

2. 한국의 산업과 고용 충격

1) 제조업 충격

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 2024년 현대차 그룹은 101만대, 한국지엠은 41만대를 미국에 수출함.
- 관세 압박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3월 24일 백악관에서 31조원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함
-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4년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 물량이 171만대인데, 미국 생산이 현재 71만대(멕시코 포함)에서 120만대로 증가하면 국내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한국지엠도 관세로 수출가격이 높아지면 현지생산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미국은 5월 9일부터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부품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음, 한국 부품업체의 대미수출 물량의 75%가 우리 기업간 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데, 관세 부과로 수출이 줄어들면 미국 내 공급망이 차단될 수 있음. 29만 명이 종사하는 국내 부품사는 완성차 생산 감소로 납품 감소 그리고 미국 직접 수출감소로 타격, 부품업체는 투자 여력이 없어 생산기지 이전도 어려움. 결국 국내 질 좋은 자동차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됨

② 반도체

- 미국은 반도체 내재화 전략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한국, 대만,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만들기 위한 CHIPS법(반도체지원법)을 도입함.
- 미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내재화는 생태계 재편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는 것임. 바이든 정부는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제조장비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 수출을 제한하고, 2024년에는 AI용 고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금지시킴, 나아가 동맹국을 압박해 미국 특허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 한국의 경우 미국이 중국 현지 공장 투자와 생산도 통제하고 있음.
- iM증권은 관세 부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 송영섭 연구원에 의하면 25% 개별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세트 업체들의 반도체 구매 비용도 25% 상승, 이 중 1/3인 8.3%를 가격 인상으로 고객에 전가하고, 나머지 16.7% 중 반반씩을 세트·반도체 업체들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8.3% 가격 하락이 발생함.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 중 미국으로 직접 수출 비중이 15~20%이므로 전체 매출에 주는 영향은 미미함. 그러나 고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대만·베트남 등에서 한국 반도체를 탑재하는 정보기술 세트가 미국으로 수출되면 한국 반도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고려하면 서버, 스마트폰, PC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관세로 수출가격이 오르면 비용 상승분의 1/3을 반도체 업체들이 부담할 것이므로 반도체 가격은 서버, 스마트폰, PC에서 각각 8%, 1%, 4%씩 상승할 것임.
- AI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대만 TSMC가 생산한 시스템반도체와 같이 포장되므로 미국 현지 팹공장 생산으로 이전할 수 있음. 이는 AI용 반도체를 독점하는 엔비디아의 GPU 칩을 TSMC가 최종 납품하기 때문임. SK하이닉스도 미국 현지 팹 건설 압력을 받을 것임.
- 한편 미국이 첨단분야 메모리 반도체까지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 삼성전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됨. 또한 중국 반도체 기술의 내재화로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결국 미국 및 중국 수출이 모두 타격을 받게되어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임.

③ 철강

-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에 277만톤 물량, 35억 달러를 수출함. 이는 전체 철강 수출의 12.4% 차지. 25% 관세 부과로 먼저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될 수 있음, 다음으로 한국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이 최대 10% 이상 감소가 예상됨.
- 현대제철, 포스코 등 철강기업들이 미국 현지생산으로 이전하거나, 국내 철강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 고용 감축 등을 추진할 수 있음.

2) 정부조달, 농·축산물, 디지털 무역 등에서 충격

- 미국은 한국의 쌀, 쇠고기, 과일, LMO 감자, 미국 소 성분이 함유된 사료 등의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공정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법의 독과점 규제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차별이라고 제기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법의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분야 등 국가핵심기술 업무에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불허를 철회하라고 요구
- 지상파, 방송, 전력, 간행물, 원전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30%)을 폐지하라고 요구
- 한국 정부의 방위산업 절충교역에서 1천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시 기술이전 등의 의무를 철회하라고 요구, 그러나 절충교역은 세계적인 관행이며 미국도 하고 있는 것임.
- 조세권, 방위산업 자립화, 정부조달에서 공공성 확보,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 기간산업 외국인 소유 제한 등의 정부조치는 경제주권 사항임, 미국도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보조금을 주고, 경제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각·지분소유 등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면서, 타국의 비슷한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임

3) 한국, 수출 및 부가가치 감소

- 하나금융연구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이 10.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2025.4.6.)
- IBK경제연구소는 미국의 25% 상호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이 12.8%, 전체 수출이 4.6% 감소 예상, 자동차 대미 수출은 작년 대비 18.6% 줄고, 일반기계도 39.7% 감소한다고 분석, 반도체는 대미 수출 증가율이 1%대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
- 금호타이어는 대미 수출의 95%를 베트남에서 생산, 한국타이어도 미국 판매물량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생산,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세가 40% 이상일 경우 두 회사만 연간 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KB국민은행).

- 한국의 가전제품,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의 많은 부분이 멕시코, 아세안, 중국 등 상호관세가 높게 부과된 나라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대외경제연구원은 미국이 20% 관세를 적용하고 상대국도 동일수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448억 달러(65조원) 감소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현재 상호관세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2024).

3. 시사점

○ 관세인상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 감소, 국내총생산 감소

- 관세 인상분은 소비자, 수입업자, 수출기업이 부담(대미 수출에서는 주로 수출기업과 소비자 부담) : 수출감소로 국내생산 감소, 기업은 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절감, 이는 부품사·협력사 임금·복지 후퇴,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완성차 특근 감소, 부품사 고용 감소(자동차 34만 반도체 15만, 철강 6.5만명 종사), 영업이익 축소로 세수 감소, 결국 GDP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는 관세를 피해 해외생산으로 이윤이 보장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표 4]와 같이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고용, 세수, 국내총생산 감소로 큰 타격임.
- 북미에서 산업생태계 재구축. 예) 전기차 : 설계-원자재-배터리-부품-완성품. 기존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북미 생태계 구축으로 재편, 한국의 입지 축소, 고용감소

[표 4] 해외투자로 국내 부가가치 유출

부가가치	한국 생산	미국 이전
이윤(배당)	한국 주주	한국 주주
이자, 임대료	한국	주로 미국
임금(후생)	한국 노동자	미국 노동자
세금	한국	미국
재투자	한국	미국
지역 산업 연관 현지 생태계 구축	한국	미국
	기술 이전, 부품 원자재 현지 조달	

자료: 저자 작성

○ 수출주도정책 대안 모색하며 경제주권 차원의 대응 필요

-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무역 시대의 마감이며, 과거 보호무역 근린 궁핍화 시대로의 복귀임.
- 미국은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을 준비(미란 보고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플라자합의와 유사한 약달러 전략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채권국들의 보유 물량을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스왑하는 방안으로, 기업이 무상으로 자본 투자를 받는 것과 비슷함.
- 한국은 FTA로 대미 관세가 제로이며 WTO 협정으로 쌀 등의 관세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합의된 것인데 미국이 위반하고 있음.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공세로 노동자, 서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함.
- 공공조달, 공정거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 노동권, 식량자립 등을 위한 규제와 공공성 확보는 경제주권을 위한 정부의 역할임.
- 보호무역 시대,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경제 확장과 수출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함.

참고문헌

강구상 외(2024),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4권 제17호.

강구상·이천기·김혁중(2025),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5.

김정현 외(2024),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76호, 산업연구원.

김영귀 외(2024), 2024년 미국 대선 :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4 No. 6.

김영무(2019), ‘미국의 통상정책과 다자통상체제의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유지윤(2024),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4-07.

미국 무역법(Trade Act) 1974년 원문본(2023.12.22. 개정),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미국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 원문본 (2007.10.16. 개정),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2024.5.24.).

트럼프 관세정책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민주노총·금속 연구원 워크숍(2025.3.18.).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2025.4.2.),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STR.

2024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STR.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STR.